

민주 중진 '鄭 공천 갈등' 중재 통할까

■ 재보선 당내 갈등 어떻게 돼가나

4·29 재보선 관련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당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 당사자 간의 신경전과 힘겨루기가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중진들이 중재에 나선 가운데 정세균 대표의 결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친이'-'친박'계가 확전을 경계하면서 조심스럽게 상황을 관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정동영(DY) 전 통일부장관의 전주 덕진 공천에 부정적 입장은 견지해온 정 대표가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상천·김영진·문희상·전정배·이석현 의원 등 4선 이상 중진 5명이 2일 여의도에서 조찬 회동을 하고 중재안을 모색해 관심을 끌었다. 중진들은 대체로 당내통을 막기 위해서는 DY 공천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입백한 당지도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금주내 정 전 장관과 최종 담판을 벌인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DY에 대한 공천 배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 주변에서는 DY 공천 배제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고 전하고 있다. 정 대표는 지난 1일 일부 당직자를 잇따라 만나 '개혁공천'과 '원칙'을 강조하며 협조를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기류에는 한광우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최근 경선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가장 우려스러웠던 전주지역 유력후보 2명의 '무소속 연대' 가능성이 사라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날 정 전 장관은 '공천이 무산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인가'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을 충분히 존중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답을 피해갔다.

◇한나라당=정수성 예비역 육군대장에 대한 사퇴압력 논란에 따라 불거진 한나라당 내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표가 지난 1일 작성한 듯 '우리 정치의 수치'라는 발언을 내놓은 뒤 전면전 가능성까지 제기됐지만, 양측 모두 더 이상의 확전을 경계하면서 밀어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의총에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오고 있다.(왼쪽)
4·29 재선기에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해 민주당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2일 오후 제주4·3평화공원을 찾а 현화, 분향한 뒤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파국 막기 공천 검토를"…丁대표 주내 결정 주목

한나라 친이-친박 '경주 갈등' 추이 따라 재연 가능성

친이계인 공성진 최고위원은 2일 "박 전 대표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조건을 단 뒤 원칙론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전제가 충족되지도 않았고, 박 전 대표가 정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상황도 아닌데 당내 갈등이 확산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갈등사태를 축발시킨 경주 선거가 아직까지 한달 가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향후 양측의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500만달러 전달 경로·도착지 아리송

연씨 '투자금' 주장 계약서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36) 씨가 박연자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500만 달러의 실체에 대해 갖가지 주측과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500만 달러의 성격에 따라 검찰 수사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는 물론 노 전 대통령 측근 인사들까지 나서서 밀어붙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500만 달러가 과연 노 전 대통

령의 뜻이었는지 여부, 따라서 박 회장이 돈을 건넨 계기와 성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2007년 하반기 서울 모 호텔에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정상문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과 함께 '3자 회동'을 한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측에 50억원 투자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연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네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연씨는 스스로 독립해 창업투자를 설립하려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박 회장과 같은 베테랑 사업가가 미래

가 불투명하고 경험도 일천한 30대 사업가에게 거액을 투자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 500만 달러의 성격과 용도에 대해 박 회장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나선 박찬종 변호사는 구치소에 있는 박 회장을 접견한 뒤 500만 달러가 봉하미을 회포전 개발용이라고 주장했다는 이를 번복했다.

연씨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박 회장에

게 서너 차례 투자설명회를 한 뒤 구두로 5년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회장이

아무리 '큰 손'이라고 할지라도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500만 달러를 빌려주고 상환 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채 5년 투자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신 못차린 광주시의회

의원 간담회서 감투 놓고 막말·욕설 市 산하기관 변호·음주운전 적발도

성폭력 의혹과 인·허가 비리 과문으로 지난해 흥역을 치른 광주시의회가 최근 들어 또 다시 의회내 막말·욕설 등 주제와 부적절한 행동이 잇따르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의원 자질문까지 대두되고 있다.

◇감투 놓고 막말·욕설= 지난달 31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전체의원 간담회는 회의실 밖에 있는 시민과 기자들이 들으라는 듯 의원들 간에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이날 간담회에서 A의원은 B의원에게 "집행부 시녀 노릇 아니냐"고 막말로 불만을 터트리자, B의원은 A의원에게 "보좌관이 다 써주니까"라며 막말로 맞받았다. 또 여성의원들 사이에서는 '나이 타령'이 벌어지면서 고성이 오갔다.

C의원과 D의원 사이엔 '죽은 감정'이 터졌다. 지난 2월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재구성 과정에서 C의원이 D의원을 향해 "미친 X"라고 욕설을 한 사실을 거론하

면서 D의원이 C의원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같이 어수선한 대툼이 계속되자 몇몇 의원들이 간담회장을 빠져 나갔고 문이 활짝 열린 회의장에서는 의원들간 삿대질하는 모습이 여과없이 노출됐다.

표면적으로는 이날 회의에 상정된 '부동산 자연 경관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원들간 이견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반복과 최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장 자리에서 놓고 떨어진 감투싸움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다.

◇집행부 변론에 음주운전까지=대의기관으로서 광주시를 견제·감시해야 할 변호사 출신 E의원은 오히려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기한 광주시 산하기관의 '행정정보공개' 소송의 변호를 맡아 물의를 빚자 지난 1일 변호인을 사임, 수임을 포기했다.

F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F의원은 지난달 24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시 교육청 앞길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가 경찰에 적발됐다. F의원은 음주운전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설정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호남지역을 배려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행령을 만들 때 국회와 협의하겠다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여야 합의도 정치적인 것이지 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주 수석부대표도 "민주당 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와 서명해준 것뿐"이라며 "정치적 의미가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해 합의에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준표 "균특법 시행령 호남 배려 요청"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야당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 호남지역의 불균형을 고착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는데 호남지역에 차별이 없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행령 개정 시 광역경제권역을 '5+3'으로

만들 때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발전을 이를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서 광역경제권을 설정할 때 호남지역을 배려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와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시행령 개정 시 광역경제권역을 '5+3'으로

이윤석 '천일염 검사 의무화법' 발의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2일 천일염에 대한 품질검사를 의무화하여 국민 건강을 물론 국내 천일염 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조업과 수입 업에 대한 품질검사를 엄연조합 및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 지난해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돼 건강한 국민 생활을 위해 철저한 품질검사를 필요하지만, 자율적인 자가 품질 검사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 5명 대정부질문

오는 6일부터 5일간 진행될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설 광주·전남지역 의원으로는 민주당 김동철·김성곤·박지원·주승용·이윤석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김동철 의원은 오는 6일 정체, 박 의원과 김성곤 의원은 7일 외교·통일·안보, 주 의원과 이 의원은 9일 경제분야 질문에 나서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다.

이들 지역구 의원 외에도 광주·전남 대표성을 가진 비례대표 의원으로 한나라당 이정현(6일)·임두성(10일) 의원, 민주당 안규택(7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 각각 나선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